

文 대통령 “규제혁신, 혁신성장 토대”

“변화 못따르는 규제 혁파해야”
 “신제품·신기술 출시 우선 허용… 사후 규제로 전면 전환”
 “국민이익이 판단기준… 기득권 보호용 규제는 과감히 혁파”



국립극장 내부 둘러보기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을 이끌고 방남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22일 오후 서울 국립극장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은 1박2일동안 서울과 강릉의 공연장을 둘러보면서 무대 조건과 필요한 설비, 객석의 규모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핀테크·신재생에너지 등 5개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소개하며 “지난 1년 사이에 규제 때문에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절반이나 됐다”며 “특히 핀테크 분야는 7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규제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이렇게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기업인들이나 혁신적 도전자들이 겪었을 좌절과 실망감에 대해 정부가 함께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의미에서 규제혁신은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도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라며 “혁신성

장의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고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며 “우리정부의 규제혁신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뒷받침해주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갖고도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적어도 시장진입이 자유롭지 못한 데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 핵심은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 우선 허용하지는 것”이라며 “근거규정

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줄지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며 “실사 기준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용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도 검토해줄지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무엇이 국민전체의 이익인가가 판단기준이 돼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제언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국민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해,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신속하게 마련해줄지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강성봉, 민주당 비례대표 도의원 승계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라북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원 정진세가 2018년 1월 17일자로 사직하였음을 통보함에 따라 1월 22일에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 의원후보자명부 추천순위 4번 강성봉(사진)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제2항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강성봉 승계자는 회사원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이다. /김진성기자

김광수 의원 지역사회사무소 신임사무국장에게 김종량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22일 지역사회사무소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신임 사무국장에게 김종량 전 지역사회사무소 행정국장을 선임했다.

김광수 의원은 “20대 국회가 3년차 반환점에 접어들면서, 올해는 지역발전은 위한 더 큰 성과를 내야할 시기”라고 강조하고 “정책개발과 국가예산 확보 등 전북발전을 위해 주요 당직자와 보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김진성기자

일자리 정보 등 15개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행정안전부는 환경영향평가, 자동차종합정보, 일자리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개방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개방 완료된 국가중점데이터는 ▲인공지능 의료영상정보(삼광원), ▲식품·의약품 안전정보(식약처), ▲환경영향평가정보(환경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공시설물안전관리정보(시설안전공단) ▲공공기관조달통합정보(조달청) ▲전통식품종합정보(식품연구원) ▲자동차종합정보(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일일예측정보(건강보험공단), ▲해양환경생태정보(해수부) ▲융복합공간정보(국토부) ▲사회복지정보(복지부) ▲일자리정보(노동부) ▲지진대피소(행안부) ▲생태자연도·식생도(국립생태원) 등 15개 분야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1만여 건의 해썬(HACCP) 인증 제품의 이미지와 메타정보(제품명, 원재료, 첨가물 알레르기 유발물질, 영양성분 등 10가지 항목)를 개방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정보를 제공한다.

국토부의 자동차종합정보는 자동차 생애주기에 따른 등록·제원·검사·폐차정보 등 2800만건을 개방해 중고차 구매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시켰다.

이밖에 하천, 도로, 제방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등급·내진 설계 적용 여부 등이 포함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정보,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정보와 건강정보, 식치정보가 포함된 전통식품종합정보 등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한 데이터가 개방됐다.

개방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의 ‘국가중점데이터’ 메뉴에서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다. /뉴시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조배숙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세율 kWh당 1.5원으로 상향’

원전소재지 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지역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배숙 의원은 22일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에 원전 소재지 이외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상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하고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

설세의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1.5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등으로 인근 지역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발전소 소재지와 같이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원자력발전소를 기점으로 30km까지 확대되어

30여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구역에 추가로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방재대책 마련 등을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빛 원전(전남 영광 소재)의 운배수 피해는 전북 고창군이 영광군보다 3배 이상 피해를 입고 있고, 어업피해 보상도 영광군의 3배를 넘게 받았음에도 고창군은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전북 고창군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